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 : 이론과 실제

김진환

목 차

I. 머리말	IV.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 현황과 과제
II. 왜 통일교육과 인문학은 만나야 할까?	V. 맺음말
III. '통일인문학'의 문제의식과 통일인문교육 평가	

[국문요약]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첫째, 평화·통일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곧,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은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과제다. 국내 학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통일인문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성장하면서 통일의 이유, 방법, 주체 등과 관련된 인식 전환을 제안하고, 통일인문학 연구 성과를

적용한 통일교육도 이루어지면서 통일인문교육 발전의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갖춰지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통일인문 과목을 새롭게 개설해왔다.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이 계속 발전하려면 첫째, 교육형식의 다양화, 둘째, 평화교육 요소 적극 도입, 셋째,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문화의 소통과 공통성 창출 관련 과목 개발, 넷째, 새로운 견학현장 발굴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주제어:** 통일인문교육, 통일인문학, 평화의 내면화, 사람의 통일, 역사적 트라우마, 코리언 디아스포라

I. 머리말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기기, SNS, 팟캐스트, IPTV 같은 뉴미디어(new media)를 활용한 통일교육,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대중문화 형식을 접목한 통일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method)의 발전’에 비해, 통일교육 내용은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 대북정책, 통일 비전과 한반도의 미래상, 한반도 주변 정세와 통일을 위한 외교, 북한사회의 정치·경제·군사·문화·교육 등 각 부문에 대한 이해, 통일 선례와 남북 통합 과제 등처럼 기본적·전통적 범주(category)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곧 통일교육 기법의 발전에 비해 ‘내용(content)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셈이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가 함께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발전 속도 ‘차이’는 실천적으로 더욱 아쉬움을 키워 준다. 상품을 파는 영업사원 입장으로 비유해보면, ‘평화·통일’¹⁾이라는 상품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국민의 평화·통일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첨단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득 논리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데,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설득 논리와 근거들은 그다지 다양하지 않다는 의견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행인 점은 몇 년 전부터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프로그램에 ‘소양강좌’ 또는 ‘통일인문학’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동북공정과 통일인식’,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통일’, ‘DMZ의 인문학적 이해’, ‘근현대사의 교훈과 통일’ 같은 과목들이 새롭게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통일교육 내용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이 초보적이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인문학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새로운 학문 분과의 성장, 곧 ‘통일인문학’의 성장을 토대로 삼고 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 ‘통일교육’ 등에 대한 정의나 이미지가 다양한 만큼, 이제 막 통일교육과 접목되기 시작한 ‘인문학’에 대한 정의도 실로 다양하다. 누군가는 사람이 창조한 모든 문화를 다루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자연이나 사회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을 ‘사람의 생각(철학), 사람의 감정과 표현(문학, 예술), 사람의 도리(윤리, 도덕), 사람이 걸어온 길(역사)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려 한다. 종합대학에서 철학, 문학, 역사 등을 탐구하는 학과들이 인문대학이라는 이름의 단과대학에 함께 있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인문학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이 글에서는 ‘평화통일’과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을 구분해 사용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방법’ 또는 ‘원칙’으로서 평화(합의)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평화·통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거쳐 통일로 가야 한다는 단계적·점진적 구상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곧, ‘평화·통일’ 개념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이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하고, 둘째,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인문학’의 문제의식과 핵심 개념,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의 실제 통일인문교육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셋째,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2018년 들어 다시 본격화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통일교육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²⁾

II. 왜 통일교육과 인문학은 만나야 할까?

1. 평화·통일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사는 한반도입니다. (...)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³⁾(강조는 필자).

위 인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코르버재단 초청연설문의 일부다.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통일보다 평화가 급선무고,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1월 문재인 정부가 위 연설을 토대로 내놓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역시 양대 비전으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운데,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⁴⁾

2) 통일교육 종사자들 중에는 2018년 들어 남북 화해·협력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이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남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보다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협력하는 일에 관심과 기대가 쏠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의의나 역할에 대한 수동적 사고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글은 이럴 때일수록 통일교육이 능동적으로 기법과 내용을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엮음,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 2017. 5. 1~2017. 10. 31』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pp. 207~208.

4) 통일부,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8), pp. 19~23.

이처럼 단계적·점진적인 통일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 초반 정립된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핵심 구상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역대 남한 정부 통일방안으로서는 최초로 단계적 통일을 명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고,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를 계승·발전시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단계로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 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화해·협력’ 단계를 설정했다.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한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해 경제·사회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인 ‘통일국가’ 단계는 남북 동수 대표로 구성된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한 뒤,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2018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단계인 남북 화해·협력이 재개된 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다시 본격화 된 해다. 남북 당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들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담대한 여정”⁵⁾을 시작했고 몇몇 눈에 띄는 결실도 맺었다. 남북 당국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했고,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또한 6월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안전보장을 서로 약속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여정이 순항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같은 과제가 완성된다면 남북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급선무 목표를 달성하고 ‘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함께 출발할 수 있을까? 먼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이미 인류는 수 십 년 전에 회의적 결론에 도달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

5)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뉘른베르거재단 초청연설에서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라며 “담대한 여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1년 2개월 뒤 평양 연설에서 이 표현을 또 다시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 중에서)

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강조는 필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1944년 사이 연합국 교육 장관들은 런던에 모여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논의했고, 이 결과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37개국 대표가 헌장을 채택해 유네스코를 창설했다.⁶⁾ 위 인용문은 유네스코 헌장 서문의 일부분이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찾아낸 지혜는 위 인용문에 적었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의 제도화’만으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것, ‘평화의 내면화’가 없다면⁷⁾ 영속적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 역시 평화를 개념적으로 세분화하며 평화정착의 어려움을 강조해왔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인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 사회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차별, 억압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한다.⁸⁾ 휴전 이후에도 계속됐던 군사적 충돌과 위협이 종전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정상화 등으로 사라진 상태가 바로 갈통이 정의한 ‘소극적 평화’일 것이다. 그런데 갈통이 지적했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마음속에 새겨진 상호 불신과 적대감 같은 비평화적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⁹⁾

한편, 평화가 제도화만으로 이룩될 수 없듯이, 통일도 제도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독일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제도의 통일’보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사람의 통일’”¹⁰⁾이 더 어려운 여정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통일된 독일이 여전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개관’; http://www.unesco.or.kr/unesco/unesco_survey/

7) ‘평화의 제도화’와 ‘평화의 내면화’는 정현백·김정수의 책에 나오는 용어다. 두 저자는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곧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대결 의식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의식으로 바꾸는 ‘평화의 내면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pp. 6~9.

8) 요한 갈통 지음, 이재봉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서울: 들녘, 2000), pp. 17~31. 이병수,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 제28권 1호 (2017), pp. 117~118.

9) 이병수, 위의 논문, pp. 134~138.

10)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서울: 알렘, 2015), p. 7. ‘사람의 통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이 글 III장 참조.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필자가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를 너무나 모른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독일과는 달리 동족상잔까지 경험한 남북이 서로 알게 모르게 쌓은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¹¹⁾

3년 넘게 격렬한 대규모 전쟁을 치른 남북한과 달리 동서독은 분단 이후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동서독 간에 커다란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유리한 조건을 토대로 동서독은 풍부한 인적 교류를 통해¹²⁾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재독한인 학자는 위에 인용했듯이 독일 통일 이후 5년이 채 흐르지 않은 시점에 “가장 큰 문제”로 동서독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을 지적했고, 이는 이후에도 여전히 통일 독일의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매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상대편 주민들이 외국인들보다 더 낮설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동서독 사람들의 비율은 20%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됐다.¹³⁾ 국가의 경계선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경계선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또한 통일 이후 10여 년이 흐른 뒤 진행한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독인은 서독인의 성격을 “거만하고”, “마치도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생색을 내는” 같은 형용사를 붙여서 묘사하고, 서독인은 동독인의 성격을 “게으른 민족”, “시중만 받고 싶어 하고”, “대단히 게으르고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¹⁴⁾ 상대 지역 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여전히 통일 독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아래 소개하는 한스 콘라드 슈만의 슬픈 최후 역시 ‘지상의 장벽’ 너머에 존재하는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증명해준다.

1961년 8월 13일, 위기의식을 느낀 동독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동~서 베를린을 연결하는 13개의 주요 도로와 80여 개의 거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베를린장벽을 건설하며 봉쇄에 들어갔다. (...)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8월 15일, 동독의 군인이었던 한스 콘라드 슈만이 분단선을 뛰어 넘어 맨 처음 탈출했고, 28년 후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2,000명이 넘는 장교와 병사들이 서독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콘라드 슈만은 냉전시대에 자유의 아이콘으로 상징되었으나, 그는 서독으로 건너간 후 오랫동안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고 독일이 통일된 후인 199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다. 결국 그 역시 베를린장벽의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¹⁵⁾

11)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 p. 8.

12) 동서독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아래 책 참조. 엄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 123~124.

13) 이기식, 『독일 통일 20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pp. 130~131.

14)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p. 178.

15) 주승현, 『조난자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서울: 생각의힘, 2018), p. 24.

이처럼 ‘마음의 장벽’이 여전한 상황에서 2009년 구동독지역 실업률 13%, 구서독지역 실업률 6.9%가 보여주듯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경제력 격차마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스스로 ‘2등 국민’이라 여기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서 동독을 의미하는 Ost와 향수라는 의미의 Nostalgie의 합성어인 ‘오스탈기(Ostalgie)’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유행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¹⁶⁾

서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제도의 통일’ 이전에도 활발히 교류했던 동서독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이처럼 두터운데, 아직도 68년 전에 시작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서로 적대하며 오랜 시간 교류도 없이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은 얼마나 더 두터울까? 위 인용문이 담긴 책의 저자 역시 ‘지상의 휴전선’ 너머 존재하는 ‘마음의 휴전선’ 탓에 힘겨워하는 자신, 그리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아래처럼 절절히 남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100곳 가까이 좌절의 기록만 남겼다. 대부분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 나를 좋다고 하는 대학을 졸업했고 각종 자격증 취득이며 어학연수까지 다녀와 이른바 8대 스펙에도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류전형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길 없어 어느 날 지원 서류를 다시 한 번 찬찬히 훑아보았다. 이력서의 군 복무 여부를 묻는 칸에는 굳이 탈북민이라고 기재했고,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과 입사 후 포부에서조차 나는 스스로 북한 출신임을 친절하게 밝히고 있었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탈북민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입사 지원을 했다.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류를 제출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줄줄이 합격통지서가 날아왔던 것이다.¹⁷⁾

B를 만난 것은 내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였다. 북한의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방송을 듣고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다. (...) 그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관청은 회사에도 취업했다. 가정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버지도 되었다. (...) 그의 좌절은 다른 곳으로부터 연유했다. 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자신의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해왔던 것이다. 탈북민의 아이와 자신들의 아이는 함께 공부할 수 없다는 항의였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조용히 짐을 싣 후 한국을 떠났다.¹⁸⁾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여름 실시하고 있는 19세

16) 엄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pp. 313~317.

17) 주승현,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p. 59.

18) 위의 책, p. 87.

이상 성인 대상 연례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보면,¹⁹⁾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조건 수용의사는 2007년 52.0%에서 2017년 34.1%로 떨어졌고,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택적 수용의사는 2007년 37.2%에서 2017년 51.4%로 올라갔다. 또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2007년 59.1%에서 2017년 40.0%로 줄어들었다.²⁰⁾

물론 자신(남한 성인)의 생활공간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는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 흐름을 보면 남한 사람들이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라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낯선 존재’와 공존하고 협력하며 통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실제 남한 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은 벌써부터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²¹⁾ ‘문화 갈등’이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나쁜 순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리하면, 인류가 20세기 초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깨달았듯이 남북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 한반도 주민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방벽”을 쌓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갈등과 대결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고, 통일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대다수 한반도 주민은 3년 동안의 전면전쟁, 65년 넘는 휴전 상태에서 계속된 수많은 군사충돌과 인명 희생 등으로 마음속에 ‘지상의 휴전선’보다 무너뜨리기 힘든 ‘마음의 휴전선’을 가지고 있고, 이는 평화·통일의 여정을 초기부터 가로 막는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의 내면화’ 또는 ‘마음의 휴전선 제거하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유네스코 헌장 서문 정신에 따르면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를 극복해야 하고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구축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제를 푸는 데는 사람의 역사와 가치관과 풍습과 생활과 도덕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인문학이 제 격이다. 요컨대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제가 아니라, 통일교육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반

19) 2006년 4월에 창립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2008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 두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여름 전국 성인 대상 ‘통일외식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 정근식 외, 『2017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241, p. 461.

21)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남한 사람들과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갈등, 명시성을 강조하는 북한과 예절을 강조하는 남한의 발화 태도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또한 가부장제나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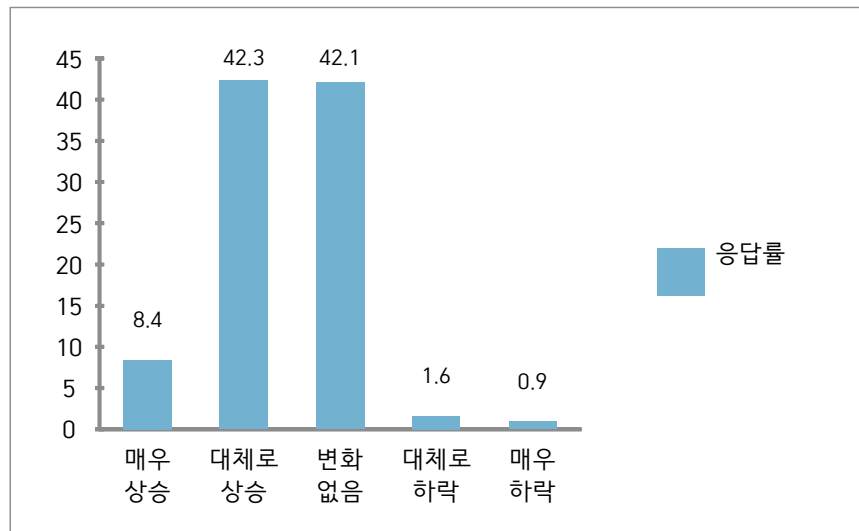
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과제다.

2.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통일교육’은 국민의 통일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양대 변수다. 먼저,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국민 대상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가 늘어날수록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²²⁾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근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남북 당국이 2018년 봄에 화해·협력 관계를 빠르게 복원한 직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필요 응답률이 2017년 54.1%에서 2018년 59.8%로 5.7%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²³⁾

통일교육이 통일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많다. 예를 들어 통일부가 2014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는 학생에게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높아졌다고 대답했다([그림 1]). 또한 일반적인 대학생 집단과 북한·통일 관련 정보에 장기 자극을 받은 집단 간에도 통일의지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결과([표 1]) 역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뒷받침해준다.

[그림 1] 학교통일교육 후 통일 관심도 변화 (단위: %)



※ 출처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17년)

22)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호 (2015).

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 통일외교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2018, p. 16.

[표 2]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 공감도 (단위: %)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		실험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2	26.7	2.0	6.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3.5		4.1	
보통이다	25.5		15.3	
대체로 공감한다	35.5	47.9	48.0	78.6
매우 공감한다	12.4		30.6	

* 통제집단 : JA Korea 주최 전국 대학생 경제교육 워크숍(2012. 5~6) 참여 대학생 597명. ** 실험집단 :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약 3개월 수강 대학생 98명

※ 출처 :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5~59, pp. 65~67.

그런데 문제는 남북관계 양상이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관계다. 그렇다보니 남한에 대한 북한의 생각,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등에 따라 우리 의도와는 다른 남북관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에 비해 통일교육의 양상은 전적으로 우리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에 비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효과성도 증명해왔다. 특히, 많은 국민에게 통일이 이제 더 이상 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그동안 통일교육 종사자들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하며 통일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현재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통일 이유 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교통·관광 중심지로 부상, 북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방비 감축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 등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 이익, 곧 경제 담론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경제 담론에 비해 남북 군사충돌에 따른 희생과 불안, 이산가족의 아픔 같은 ‘현존하는 불안과 고통’을 다루는 평화·치유 담론은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민족 담론, 곧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통일의 의의를 찾고 통일을 설득하는 담론은 교육 주체나 교육 대상 모두에게 낯은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선·김희정·임수진도 2016년에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통일당위성 담론을 ‘민족주의 담론’, ‘통일편익 담론’, 평화, 인권,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보편적 가치 담론’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통일 당위성 담론 중 한 가지를 통일 이유로 수용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일의지, 북한인식 등을 비교했는데,²⁴⁾ 이들 역시 아래 인용문처럼 ‘민족주의 담론’ 약화와 ‘통일편익 담론’ 강화를 기존 통일교육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초기 통일교육에서 민족담론에 의거한 통일교육은 남북한 분단을 직접 경험한 분단 1세대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직관적으로 당연한 논리였으나, 세대가 변화하며 이러한 논의는 점차 정당성을 잃게 되며 새로운 담론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안정과 같은 국가경쟁력 증진 등을 근거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실용주의적 통일담론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⁵⁾

지난 몇 년 동안 통일교육이 경제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평화·치유 담론이나 민족 담론이 상대적으로 주변화 된 배경에는 교육 주체가 지닌 세 가지 선행적 판단이 놓여 있다고 분석된다. 먼저 저성장, 취업난 등을 겪으며 국민들이 경제적 이해에 가장 민감할 것이라는 판단, 다음으로, 남북 군사충돌에 따른 희생과 불안, 이산가족의 아픔 등은 만성적이고 해결이 쉽지도 않은 문제라 교육 대상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끝으로,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등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경제 담론 중심 통일교육은 중요한 의의와는 별개로,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이나 통일교육 요구에 잘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연령대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 연령대로 보면 아직도 성인 중 절반 가까이는 ‘민족적 일체감’을 가장 중요한 통일 이유로 꼽고 있다([표 2], [표 3]). 통일교육이 민족 담론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도 괜찮은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선·김희정·임수진이 통일당위성 담론별 통일의지를 분석한 결과도 민족 담론의 주변화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들은 민족주의 담론 집단, 통일편익 담론 집단, 보편적 가치 담론 집단 중 민족주의 담론 집단이 통일에 가장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였다고 “이는 그동안 주장되었던 민족주의 담론에 의거한 통일교육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²⁶⁾

[표 2] 성인의 연령별 통일 이유 응답률 (단위: %)

24) 김선·김희정·임수진, “통일당위성 담론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교육문화연구』, 제23-6호 (2017).

25) 위의 논문, p. 30.

26) 위의 논문, p. 43.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남북 간의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9~29세	31.0	8.6	38.8	4.4	17.2
30대	33.6	11.5	36.6	4.6	13.6
40대	38.4	12.4	31.7	3.7	13.7
50대	44.2	8.4	34.5	3.5	9.0
60대 이상	54.5	11.5	20.7	3.9	9.4
전체	40.3	10.5	32.5	4.0	12.5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2017년)

[표 3] 성인의 통일 이유 응답률 (단위: %)

연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남북 간의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2007	50.6	8.9	19.2	1.8	18.7
2008	58.4	6.5	14.4	2.9	17.2
2009	44.0	8.5	23.4	4.2	18.5
2010	43.1	7.0	24.1	4.0	20.7
2011	41.7	7.2	27.2	4.8	17.7
2012	45.9	9.1	25.3	4.4	14.5
2013	40.3	8.3	30.8	5.5	14.2
2014	42.4	8.8	26.9	3.8	17.6
2015	41.9	11.5	25.7	6.2	14.1
2016	39.0	12.2	29.2	4.8	14.2
2017	40.3	10.3	32.5	3.9	12.9
2018	45.1	6.9	31.4	3.4	12.9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 통일 의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2018, p. 17.

특히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민족적 일체감’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2018년 봄을 거치며 두드러지게 성장한 사실이 주목된다. 2017년 40.3%에서 2018년 45.1%로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표 3]).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국민의 평화열망 추이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둘째, 성인과 청소년²⁷⁾의 통일 이유 응답률 추이를 보면, 경제 담론 교육보다는 평화·치유 담론 교육이 현재 통일의식에 좀 더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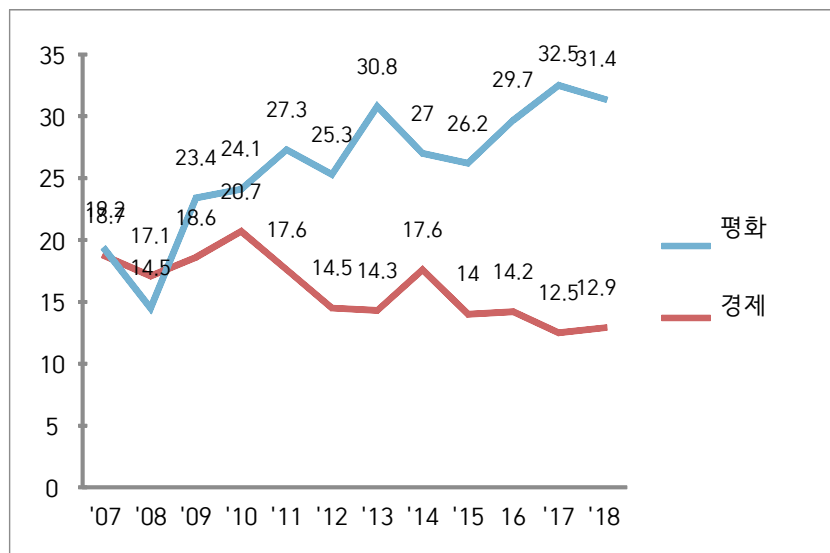
남한 성인은 탈냉전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통일 이유로 ‘평화’와 ‘경제’라는 두 개의 가치를 비슷하게 선택해왔다. 예를 들어 민족

27)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1994년 조사 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 59.0%는 통일 이유로 ‘민족의 재결합을 위하여’를 1순위로 꼽았고, ‘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14.6%)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14.2%)가 거의 차이 없는 2순위, 3순위를 차지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던 2005년 통일연구원 조사 때는 ‘단일민족의 재결합’(35.0%)에 이어 ‘경제 발전’(27.9%)이 ‘전쟁 발생 방지’(20.4%)를 7%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7년, 2008년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가 1순위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2007년 19.2%, 2008년 14.5%)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2007년 18.7%, 2008년 17.1%)가 다시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북핵 문제 악화가 계속되면서 둘 중에서 ‘평화’를 더 중요한 이유로 꼽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²⁸⁾ 탈냉전시대 조사 때는 ‘경제’와 ‘평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점차 평화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 북한의 2차 핵실험,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중단 등 북핵 문제가 악화된 2009년 이후부터는 ‘평화’가 20%대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경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준다([그림 2]). 흥미로운 점은 2015년 이래 계속 상승하던 평화 응답률이 2018년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앞에서 말했듯이 ‘민족적 일체감’은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평화열망은 낮추고, 민족적 일체감은 높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다.

[그림 2] 성인이 꼽은 통일 이유 : 평화와 경제 (단위: %)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28)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pp. 90~91.

청소년 역시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보다 더 많이 이유로 꼽았고, 평화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표 4]).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북한과의 민족적 일체감이 약하고, 따라서 통일을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여기지는 않지만, 평화정착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 [표 4]).

[표 4] 청소년의 통일 이유 응답률 (단위: %)

연도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음식도 먹어보고 여러 관광지들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2014	25.8	24.7	18.9	13.7	-	12.3	2.7
2015	26.5	24.8	16.5	15.6	5.9	5.5	3.1
2016	28.2	25.2	16.2	14.6	6.6	5.7	2.1
2017	31.8	25.0	15.0	14.2	6.3	5.4	-

※ 출처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상 살펴본 것처럼 성인의 경우 1990년대 초반~2000년대 중반 통일의식과 2000년대 후반 이후 통일의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청소년도 평화라는 가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던 교육 관성에 따라 경제 담론 교육에 치중하고, 평화 담론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주민 생활의 개선 등을 향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통일 이유로 꼽고 있다는 사실([표 2], [표 3], [표 4])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존하는 고통의 제거를 지향하는 치유 담론을 통일교육의 변두리에서 중심지로 이끌어 올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은 아직 본격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담론에 대한 교육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단, 청소년은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 등에 비해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 문제는 돈이 아니라 북한의 호전성과 불변성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청소년이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차이’를 통일의 주요한 장

애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교육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청소년에게 앞으로 희망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을 묻자 ‘통일의 이익과 비용’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북한의 생활모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궁금해 했던 것이다([표 6]).

[표 5] 청소년이 꼽은 통일 장애요인 (단위: %)

연도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부족	주변 국가들의 통일에 대한 경계 또는 반대
2014	38.4	-	27.9	14.3	9.6	6.1
2015	28.7	23.3	20.2	12.7	7.4	3.9
2016	32.1	23.4	17.6	12.6	6.9	4.5
2017	33.7	25.0	17.2	10.2	6.5	5.2

※ 출처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표 6] 청소년이 희망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 내용 (단위: %)

연도	북한의 생활모습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통일의 이익과 비용
2014	38.9	22.1	12.2	11.7	9.4
2015	40.4	24.4	12.4	9.2	10.2
2016	41.0	22.9	13.8	10.2	8.7
2017	38.6	23.6	12.7	11.3	10.1

* 2017년에는 ‘주변국가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을 보기로 제시.

※ 출처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담론 중심 통일교육은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 통일교육 요구 등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오늘날 남한 성인과 청소년은 민족사 속에서 분단과 평화·통일이 갖는 의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평화와 통일의 관계, 통일 상대방인 북한 사람들의 실제 가치관과 생활모습, 현존하는 고통의 치유 등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육은 첫째, 분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안과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었고, 안겨줄 수 있는지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둘째, 이러한 불안과 고통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남북한 사람들의 실제 가치관과 생활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 지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사람의 역사와 가치관과 풍습과 생활과 도덕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인문학과와의 만남이 역시 필수적이다.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은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제가 아니라, 통일교육이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과제다.

Ⅲ. ‘통일인문학’의 문제의식과 통일인문교육 평가

Ⅱ장의 결론은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은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과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토대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Ⅲ장에서 ‘통일인문학’이라는 신생 학문의 문제의식, 핵심 개념,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이 수행해 온 통일인문교육 사례 등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이다.

‘통일인문학(Humanities for Unification)’은 그동안 ‘제도의 통일’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온 ‘사람의 통일’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앞서서도 비교했듯이 남북한은 동서독보다 더욱 긴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동서독에 비해 교류 경험은 많이 부족하고, 게다가 동서독과 달리 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제도의 통일’도 어렵지만 ‘사람의 통일’이 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나 민간의 통일 논의가 주로 남북의 정치, 경제, 교육, 사법, 국방, 사회보장 등 다양한 제도를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제도의 통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게 통일인문학의 평가다.

국내 학계에서 통일 연구와 인문학의 접목, 통일의 인문적 비전을 선도적으로 주창해왔던 대표적 학자로는 강만길, 백낙청을 꼽을 수 있다. 강만길이 가장 중시하는 통일 이유는 ‘평화’고, 백낙청이 추구하는 통일은 ‘도덕의 힘’이 이끄는 통일이다.

통일의 당위성에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핏줄이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으며 또 오랫동안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살아 왔다는 지나간 일, 즉 과거 중심적인 통일 당위론에 한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 같은 핏줄이니까 또 분단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일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7천만 남과 북의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21세기에 평화롭게 살기 위해, 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통일의 당위성을 미래지향적인 데서 찾자는 것입니다.²⁹⁾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트남은 무력통일을 했고 독일은 금력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도덕통일을 할 처지입니다. (...) 남쪽이 이기느냐 북쪽이 이기느냐가 아니고,

29) 강만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서울: 당대, 2003), p. 43, p. 55.

돈이나 총칼의 힘에 기대어 순리를 거스르려는 세력을 도덕의 힘, 진리의 위력으로 설득하고 제압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통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³⁰⁾

이들의 선도적 업적을 기반으로 2009년에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출범하면서 통일인문학의 정립과 성장이 본격화됐다.³¹⁾ 통일인문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의 통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단시대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이 찾아낸 ‘분단시대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분단시대의 사람은 일제 강점기와 분단을 연이어 겪으면서 남과 북, 해외에 흩어져 살게 됐고, 이러한 이산 탓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 달라진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 등을 지니게 됐다. 코리언³²⁾의 문화는 일제 강점기 민족 이산, 70년 넘는 분단을 거치며 ‘한민족 다문화’³³⁾라는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질적으로 변용되어 왔다. 설령, 남북한 사람들이 분단 이전에 매우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매우 이질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중국 같은 이질적인 외래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온 두 집단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 차이는 커지고 말았다. 재일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같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문화 역시 거주하는 사회의 정치·경제구조와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³⁴⁾

둘째, 분단시대의 사람은 치유되어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이다.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란 민족의 강제이산과 남북 분단을 야기한 일제 식민지배,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킨 한국전쟁, 전후 남북대결 같은 역사적 사건이 몇몇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안겨주었거나 지금도 안겨주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가리킨다.³⁵⁾ 예를 들어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식민주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 받고 있고, 이산가족,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남북 군사충돌의 희생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피해자 등은 남북 분단과 대결로 인한 고통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분단시대의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사람의 통일론’을 아래처럼 정의한다.

30)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서울: 창비, 2009), pp. 289~290.

31) 필자도 2010년 2월부터 통일인문학연구단에 HK연구교수로 결합해 만 5년 이상 통일인문학의 정립과 성장에 함께 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걸어온 길은 홈페이지(<http://tongil.konkuk.ac.kr>) 참조.

32) 이 글에서 ‘코리언’이라는 용어는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재외동포 등을 통칭할 때 쓸 것이다.

33)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문화적 공존상황을 ‘다문화’라고 칭하는데, 이는 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 출신과의 공존, 즉 ‘다민족 다문화’ 상황을 연상하며 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의 반수 이상과 귀화자 대다수는 근대 초기의 이른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주류 집단인 중국 조선족 등 한민족 출신 재외동포 이주민이어서, 이들과의 사회문화적 공존 상황은 ‘한민족 다문화’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병호·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공간』 (서울: 현암사, 2011), p. 40.

34) 김진환·김준근, “코리언 생활문화 : 개념, 의의, 연구방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코리언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pp. 23~29.

3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 p. 190.

‘사람의 통일’은 체제통합을 떠받치는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공존이 절실한 지금의 현실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통일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론은 우선,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된 정서와 욕망이 무엇인지에 주목합니다. 남북의 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믿음과 성향들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성향들을 낳는 적대적인 사회심리가 무엇인지를 성찰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찰을 통해 서로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소통하고,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적대 감정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통일’론은 궁극적으로 통일한반도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사람의 통일론’은 남북 주민들 사이의 소통, 분단 상처의 치유 그리고 가치·정서·생활문화상의 공통성을 창출하려는 소통·치유·통합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³⁶⁾

필자의 해석을 가미해 좀 더 간단히 명제화하면 ‘사람의 통일’이란 ‘코리언의 가르치며 배우는 소통³⁷⁾을 통해 서로가 지닌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시도하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관 등을 매개로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의식, 핵심 개념 등을 토대로 통일의 ‘이유’, ‘방법’, ‘주체’ 등에 대해 인식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통일 이유와 관련해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은 아래 인용문처럼 ‘나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고통의 제거 의지를 통일의 주된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 미래의 어떤 도달 상태를 전제로 하는 득실의 계산보다 지금 당장의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고통의 성격에서 유래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볼 때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인간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절박한 문제이다. 고통 상황의 극복이 행복의 증진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즉, 고통의 회피가 쾌락의 추구보다 더 기본적이다. 인간은 긴급하게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긴급하게 고통을 피하려 한다.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은 쾌락의 추구보다 더 강렬하고 긴급하며 절박하다. 이런 점에서 고통은 쾌락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행위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6) 위의 책, pp. 7~8.

37) “다시 말해 ‘다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다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소통은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쌍방향적인 소통’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 pp. 28~29.

그 어떤 이념적 당위보다는 고통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 동력이다. 고통은 쾌락과는 달리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추구하고 달리 고통의 제거는 인간 삶에 절박한 윤리적 문제이다.³⁸⁾

달리 말해,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해소와 치유가 통일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이유라는 주장인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유행했던 경제중심적 통일론, 곧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통일의 동력 또는 국민 통일 의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보자는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실천적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도움과 친절”은 나와 상대방의 고통을 모두 약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 분야를 개척한 마틴 셀리그먼은 작년에 낸 책 『번성하라』에서 어떤 동료 교수의 소년 시절 추억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소년이 무슨 일인가로 잔뜩 기분이 상하고 풀이 죽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면 엄마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애야, 너 오늘 영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얼른 나가서 누구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 보렴.” 엄마의 그런 ‘기분 전환법’을 들으며 자란 소년은 지금 대학에서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낫는다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치유법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학문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그 교수는 엄마가 알려주곤 하던 그 치유법의 효과 유무를 엄밀한 과학적 실험에 부쳐 검증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엄마의 방식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엄마가 한 말은 “우리 아들 기분이 영 말이 아니구나. 어디 가서 맛 좋은 것 사줄까?”도 아니고 “우리 구경 갈까?”도 아니다. “나가서 누구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와보렴”이다. 타인에게 베푸는 도움과 친절은 그게 아무리 작은 도움이고 친절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 자신을 들어 올려 존재의 상승을 경험하게 한다. 사람을 마술처럼 바꿔놓는 것은 항용 이런 존재 상승의 경험이다.³⁹⁾

둘째,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은 점진적·단계적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 한국전쟁과 이후 군사충돌로 쌓인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 남북한 사람들이 살아왔던 제도의 크나큰 차이에 따른 문화 차이의 확대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단기간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균은 통일을 “해외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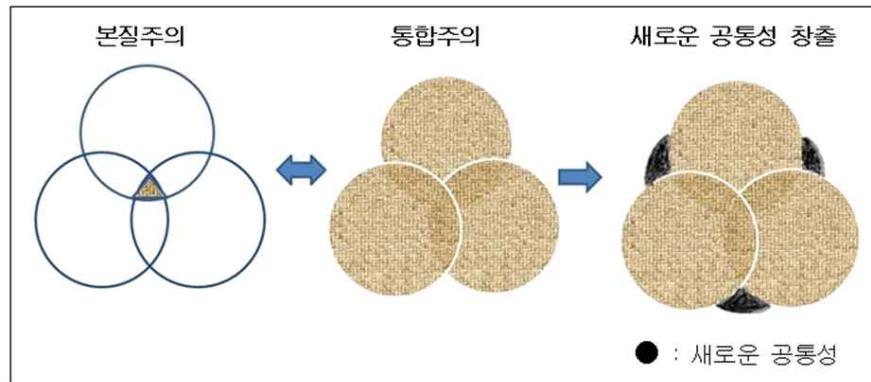
38)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사상이념팀 엮음,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서울: 선인, 2011), pp. 51~52.

39) 도정일,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서울: 문학동네, 2014), pp. 39~40.

리언들을 포함한 남북이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생성하는 새로운 규칙, 즉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자고 제안하면서,40) 이를 위한 전제로 개별 사람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소통’을 강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 이론가들이 말하는 ‘상호문화주의’와 비슷하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단일문화주의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문화를 하나의 컨테이너처럼 독립적 단위로 바라보며 상호 교류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호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변화시켜가며 살찌우는 대화적 교류, 서로 간에 존재하는 경계와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당위적 지향으로 제시한다.41) 아래 [그림 3]의 본질주의가 단일문화주의와 유사하고, 통합주의가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다면, ‘새로운 공통성 창출’을 추구하는 태도는 상호문화주의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 ‘사람의 통일’의 원칙과 방향



셋째,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은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뿐 아니라 해외와 한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의 통일’이 통일 과정의 전부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반도에 살고 있더라도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참정권(參政權)이 없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의 통일 못지않게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통일인문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국적에 상관없이 통일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0) 박영균, “통일의 인문적 비전 : 소통으로서 통일론,” 『시대와 철학』, 제24권 3호 (2013), p. 229.

41)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 66 (2009), pp. 307~310.

먼저 코리언 디아스포라란 누구인지 알아보자. 학계에서는 다양한 재외동포 중에서 대략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에 ‘강제적’인 이유로 대량 이주한 사람들을 구분해 ‘코리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다. 곧, 코리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해외에서 한민족을 지칭하는 영어 코리언(Korean)과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민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합성어로 ‘한반도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채 해외에서 살아가야 했던 한민족 구성원과 그의 후손’을 가리킨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중 조선족,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사할린 한인 등이 있다.

그렇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왜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구성원이 일제 식민지배,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통일은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된다. 둘째,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한반도 밖에서 살아오면서 민족 전통을 토대로 삼아 각 지역의 생활환경, 사회제도에 맞춰 독자적인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를 발전시켜왔으므로, 민족 구성원이 서로의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통일 과정에도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한반도 주민 못지않게 남북 대결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왔으므로,⁴²⁾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제도의 통일’ 역시 코리언 디아스포라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과제가 된다.

통일인문학 연구자들은 통일의 이유, 방법, 주체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연구 뿐 아니라 통일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통일인문학을 선도하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한 인문학과 접목된 통일교육, 곧 ‘통일인문교육’ 사례를 살펴보자.⁴³⁾

첫째, 남북한 사람들의 차이 확인과 공통성 마련을 위한 교육이 눈에 띈다. 일단 통일인문학연구단은 매 학기 온라인 교양강의로 「통일의 인문학적 이해」를 개설해 통일인문학의 문제의식, 핵심 개념 등을 건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학기에는 통일부 지원을 받아 오프라인 교양강의 「분단의 지성사, 통일의 지성사」를 새롭게 개설해 남한 대학생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함께 남과 북의 지성사를 살펴봤다. 또한 통일인문학연구단은 대학 내에 머물지 않고 남북 문화 공감을 위한 시민교육에도 주력해왔다([표 7]). 통일인문학연구단에 따르면 시민 대상 강좌는 북한 바로 알기 차원을 넘어서 향후 남북 문화의 소통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다고 한다.

42) 냉전시대 재일조선인 사회 내 민단과 총련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43) 통일인문학연구단의 통일인문교육 사례는 통일인문학연구단이 필자에게 제공해 준 통일인문학 교육성과 정리 자료를 참고해 서술했다.

[표 7]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시민 강좌

주제	기간	협력 기관	장소	수강 인원
신화의 나라 코리아	2017.09.27. ~ 2017.11.01.	서울시	건국대	40
신화의 나라 코리아	2018.04.10.		충북대	230
북한 애니메이션으로 본 김정은 시대	2017.09.21.		충북대	30
영화로 보는 북한, 북한 사람들	2017.09.15.		연세대	30
북한 문화와 최근 변화	2018.04.30. ~2018.05.04.		한양대, 세종대, 안양대	360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 트렌드	2018.06.07.	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1동	30
인문학으로 만나는 남북한 문화	2018.06.14.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대학로 예술가의 집	30
북한, 대중문화로 읽다	2018.06.15.	세계평화여성 연합	선문대 아산캠퍼스	40

* 출처 : 통일인문학연구단 제공 자료

둘째, ‘정서적 공감’, ‘치유’ 등이 통일교육의 핵심 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2018년 1학기부터 오프라인 교양강의로 「갈등조정을 위한 치유 콘텐츠」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강의는 분단 문제와 남남갈등 및 정치적 분열 등 사회 갈등에 주목해, 한국사회를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통합서사 발굴, 치유 콘텐츠 제작 등을 목표로 하는 ‘창작형’ 강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유의 인문학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표 8]).

[표 8] 통일인문학연구단의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사례

형태	주제	기간	협력 기관	장소	수강 인원
강연형	미리 온 통일세대, 탈북민의 삶과 트라우마	2017.09.09.~ 2017.10.14.	한국도서 관협회	길꽃어린 이도서관	30
체험형	탈북민과 함께 뛰어놀자	2017.10.14	한국도서 관협회	방화근린 공원	20
탐방형	(추석맞이)고향과 가까운 곳을 향하여	2017.09.30	한국도서 관협회	파주 일대	20
강연형	남북이 함께 읽는 우리 옛이야기	2018.04.07.	남북하나 재단	길꽃어린 이도서관	25
	우리가 몰랐던 북녘의 옛이야기	2018.04.21.	남북하나 재단	길꽃어린 이도서관	25
	이청준 <눈길>을 통해 본 빈곤과 가족해체의 문제	2018.05.26.	남북하나 재단	길꽃어린 이도서관	25

* 출처 : 통일인문학연구단 제공 자료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청소년 통일교육도 정서적 공감과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연보다는 체험·창작, 놀이 같은 교육형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는 연천고등학교와 함께 「영화로 보는 치유의 인문학」, 「문학을 통해 본 코리안의 근현대사」, 「우리가 만드는 통일인문콘텐츠」 같은 체험형·창작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에 윤중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만드는 통일 연극」이라는 제목 아래 분단과 통일 관련 연극 작품 3개를 함께 창작하고 상연하기도 했다.

특히 통일인문학연구단이 2018년 6~7월에 초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야기로 만나는 남북의 전통놀이 문화」는 내용과 형식 모두 앞으로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 같다. 통일인문학연구단에 따르면 이 강좌는 전통놀이가 남과 북이 함께 할 때 큰 부딪침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라는 데 착안해, 남과 북 어린이들의 놀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경험하고, 즐거운 놀이로써 막힘없는 소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가상의 탈북청소년이 들려주는 북한 전통놀이 이야기, 탈북과정 및 남한살이의 고충 등을 들으면서 탈북청소년의 애환도 정서적으로 공감했다([표 9]).

[표 9]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어린이 통일교육 사례

강좌명	이야기로 만나는 남북의 전통놀이 문화
강좌1 6월 21일(목) 인천 연수어린이도서관	옥수수대 연을 타고 날아온 아이 : 탈북청소년의 탈북경험담과 연 만들기·실뜨기·다리세기 활동 강사 : 김종곤(건국대 HK연구교수)
강좌2 6월 28일(목) 인천 연수어린이도서관	팽이가 잘도 잔다 : 탈북청소년이 경험한 문화 갈등 사연과 팽이치기·딱지치기·진놀이 활동 강사 : 남경우(건국대 시간강사)
강좌3 7월 5일(목) 인천 연수어린이도서관	전국 팔도를 돌아보자 : 탈북청소년의 고향 기억과 옷놀이·비사치기 활동 강사 : 윤여환(한신대 시간강사)

* 출처 : 통일인문학연구단 제공 자료

총평하면, 통일인문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에 비해 실천적 토대는 아직 탄탄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주도하는 통일인문학 이론의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활용한 통일교육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통일인문학연구단의 핵심 기여는 남북한 문화의 소통과 공통성 창출, 정서적 공감과 치유 등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경제, 국제정세, 대북정책 등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졌던 주제들을 통일교육의 중심에 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는 아쉬움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분단, 평화, 통일의 의미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이 미흡하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통일의 주체로 바라보게 해줬으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아쉬움이다.

둘째, 2018년 1학기부터 통합서사 발굴을 통해 사회 갈등을 완화시켜보려는 교양강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 ‘평화의 내면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서사적 접근에 더해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평화적 갈등해결능력 함양 같은 평화교육의 요소들을 통일교육의 핵심 요소로 적극 포함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셋째, 창작·체험형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통일교육 장소가 강당이나 교실이라는 점도 아쉽다. 물론 통일인문학연구단도 2012년 1학기부터 매 학기 「통일의 인문학적 이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DMZ 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인문체험형 DMZ 투어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그래도 통일인문학의 독창적 문제의식을 고려하면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찾아가는 현장은 DMZ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

IV.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 현황과 과제

민간부문에서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라면, 공공부문에서 통일인문교육을 앞장 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바로 통일교육원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은 특히 ‘역사적 접근’을 강화하면서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교육과 다른 방향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IV장에서는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 과목 중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같은 중·장기과정에서 외부강사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목(「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동북공정과 통일인식」 등)은 제외하고 통일교육원 원내교수가 맡고 있는 과목을 살펴본 뒤, 통일인문교육 발전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할 것이다.

1. 통일인문 과목 현황

「근현대사의 교훈과 통일」은 2017년 가을부터 통일교육의 참여·소통성 강화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원내 강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정책 현안·정세 현황 중심 원내교육에 인문학·역사학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원내교육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이 과목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통일교육과 근현대사교육의 관계 이해,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수난 인식, 근현대사가 통일에 주는 교훈 인식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첫째,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근현대 ‘수난의 기억’은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의식에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근현대사교육은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상승시키고, 통일의지를 높이는 데 용이하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둘째, 우리 민족은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이 시작된 때부터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까지 국권 상실, 한반도 밖으로의 원치 않는 이주, 경제적 궁핍, 일제 강제동원 등 수난과 고통을 겪어 왔음을 알게 해 준다. 셋째, 통일은 우리 민족이 근현대에 겪은 수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자,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이들, 한반도 밖으로 떠돌아야 했던 ‘코리아 디아스포라’ 등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대가 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과목은 강의와 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목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원내강의와 현장견학을 결합해 진행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현장견학만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강의하는 경우다. 전자는 원내강의실에서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학습한 뒤, 통일교육원 인근 유적 중 순국선열 무덤 일부(이명룡, 이준, 이시영과 광복군)를 탐방하고, ‘근현대사기념관’ 관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 이명룡 묘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105인 사건’과 서북 지역 독립운동, 3·1독립운동 등을 이야기하고, 이준 묘역에서는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 과정,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이상설의 활약과 만주 독립운동 등을 다룬다. 끝으로 이시영과 광복군 묘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신흥무관학교와 일제 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을 알려준다. 이렇게 할 경우 대략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만약 교육일정상 이 정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원내강의를 생략하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현장견학만 진행한다.

[그림 4] 「근현대사의 교훈과 통일」 현장견학 모습



한편, 2018년에는 「근현대사의 교훈과 통일」을 기반으로 삼아 총 15차시(1차시 당 약 25분)로 구성된 온라인 과목 「독립과 분단에서 평화와 통일로!」를 제작했다. 이 과목의 목표는 19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독립과 분단에서 평화와 통일로!」가 오프라인 과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통일」은 2016년 상반기에 총 4차시 온라인 과목이 먼저 만들어지고, 곧이어 원내 오프라인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이 과목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특징,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통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 주체에 대한 사유를 ‘남한 사람들 + 북한 사람들’에서 ‘남한 사람들 + 북한 사람들 + 코리언 디아스포라’로 확장하고, 통일 과정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사유를 ‘경제적 기여’에서 ‘경제적 기여 + 문화적, 정치적, 외교적 기여’로 확장해준다.

구체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밖에서 각 지역의 생활환경, 사회제도 등에 맞춰 독자적인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를 발전시켜왔으므로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고(문화적 기여), 대다수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남북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남북교류의 다리, 남북한 문화 중개자 등 다양할 역할을 할 수 있으며(정치적 기여), 거주하

고 있는 각 국가 안에서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민간 통일외교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외교적 기여) 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DMZ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단순히 비무장지대(DMZ) 관련 개념(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민통선, 접경지역 등)이나 현황 등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과목이 아니다. 이 과목은 DMZ라는 공간을 매개로 19세기 이래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사유해보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DMZ의 탄생’에서는 19세기 후반~20세기초 한반도 역사 흐름을 이해하고, ‘DMZ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 DMZ 일원에서 펼쳐졌던 남북관계 주요 사건들을 인식하며, ‘DMZ 없는 한반도’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DMZ 미래 구상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통일교육원에서는 DMZ 현장견학 전에 이 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현장견학의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이해」 역시 「DMZ의 과거, 현재, 미래」처럼 현장견학과 기초적인 역사 지식을 결합시킴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여 주는 과목이다.⁴⁴⁾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리더캠프 같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진행하는데, 북·중 접경지역 답사 참가자들은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북·중 접경지역의 이해」를 수강한다.⁴⁵⁾

이 과목은 먼저 ‘북·중 접경의 형성과 성격’에서 과거 조선과 청의 국경 분쟁부터 시작해 1962년 북·중 국경조약 체결 때까지의 쟁점과 결과, 북·중 접경의 지정학적 의미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북·중 접경의 지리와 인문’에서는 북·중 접경의 하천과 산, 양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주요 변경도시의 위치와 인구 등을 학습한다. 끝으로 ‘북·중 접경지역과 통일’이라는 소주제 아래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왜 우리가 평화·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는지를 토론해 본다.

예를 들어 필자는 북·중 접경지역이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야만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유를 모두 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답사 참가자들은 첫째, 명동촌, 대성중학교, 뤼순 감옥, 뤼순 관동법원 등 여러 독립운동 현장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들(이상설, 윤동주, 송몽규, 안중근, 이회영, 신채호 등)이 꿈꾸던 미래에는 결코 분단된 한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둘째, ‘독립의 염원을 담은 강’에서 ‘이산의 아픔이 서린 강’이 된 두만강, 압록강변의 뚝배기밭 등을 바라보며 분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큰 멍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셋째, 신압록강대교와 신두만강대교, 북·중 접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과 물류 거점 등을 눈으로 직접 보며 ‘동북아시아 평화·변영의 촉진자’로 거듭 날 미래 한반도를

44) 여행 작가 안성교는 “역사 여행은 저마다의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던 역사적 사실을 장치로 하여 유추해낸 자기 안의 이야기와 동행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시간과 내가 소통되려면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안성교, 『경계를 여행하다』 (서울: 라이프맵, 2017), p. 44.

45) 「북·중 접경지역의 이해」는 이전부터 통일정책지도자과정에 개설되어 있었지만, 2017년부터 강의자가 외부 강사에서 원내교수로 바뀌었고, 북·중 접경지역 답사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주요 내용에 포함되었기에 통일교육원의 새로운 통일인문 과목으로 분류했다.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목들이 역사 지식과 현장견학을 결합해 분단, 평화, 통일을 한반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평화·통일의지를 높이는 과목들이라면, 「DMZ의 인문학적 이해」는 수강생이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DMZ의 인문학적 이해」는 크게 DMZ 관련 개념 이해, 통일을 보는 인문학적 시각의 특징, ‘민통선 사람들’의 고유한 트라우마 이해, 주민 친화적인 DMZ 미래 구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은 DMZ 일원을 분단의 ‘물리적 상징’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넘어, 민통선 사람들의 삶의 공간,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지켜온 생활터전으로 바라보게 되고, 민통선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끝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본 북한 이해」⁴⁶⁾에서는 먼저 문화예술의 일반적 특징을 알려준 뒤 북한 문화예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북한 문화예술을 음악, 체육, 미술, 영화 부문으로 크게 나눠 각 부문별로 특징, 최근 공연이나 작품의 내용과 의미 등을 여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설명해준다. 수강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다.

2. 통일인문교육 발전 과제

지금까지 소개한 과목들은 모두 2016년부터 통일교육원에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이다. 통일교육원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양한 통일인문 과목을 오프라인·온라인에 개설하며 공공부문의 통일인문교육을 선도해왔다. 아래에서는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보적 단계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보겠다.

첫째, 교육형식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그것에 비해 창작이나 놀이처럼 다양한 형식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원내강의 또는 원내강의와 현장견학이 결합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통일교육원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세대, 다양한 교육형식에 대한 요구가 많은 청년교사, 유치원교사, 예비교사(교육대학생, 사범대학생 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문교육은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통일인문학연구단의 통일인문교육이 아직은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평화적 갈등해결능력 함양 같은 평화교육의 요소들을

46) 김정수, “문화예술을 통한 북한이해,” 『제3차 중견실무공무원반 교육안내 및 교재(2018. 11. 7.~11. 9.)』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p. 35~39.

통일교육의 핵심 요소로 적극 포함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통일교육원이 통일인문학연구단에 비해 역사적 접근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평화의 내면화’를 위한 평화교육 요소와 통일교육의 접목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다.

현재 통일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같은 과목은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주로 설명하므로,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쌓인 적대감의 해소,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시야를 넓혀 독일, 영국과 아일랜드, 중동, 남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오랜 분쟁을 정치적·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평화의 제도화’와 동시에 또는 ‘평화의 제도화’ 이후에 어떻게 ‘평화의 내면화’를 추구해왔는지를 다루는 과목을 개설한다면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은 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셋째,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남북한 문화 차이의 이해와 존중, 새로운 문화적 공통성 창출 등을 지향하는 교육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아직도 통일인문교육은 이산가족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 「이산가족 문제의 이해」(가칭) 같은 과목을 개설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산가족과 실향민 주제로 특화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한 공간을 ‘이산가족 상설 전시관’으로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교육 역시 정착 현황이나 정착지원 법·제도 소개에 그치지 말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가 그러한 지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수강생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살이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그다지 만족스러운 교육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본격적 대화 전에 사회자인 원내교수가 20~30분 정도라도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특징 등을 이야기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화가 될 것이다.

끝으로 문화 관련 교육도 지금처럼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본 남북한 사람들의 감성 차이와 공통점」(가칭),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와 과제」(가칭), 「코리언의 전통 윤리와 통일 한반도의 윤리학」(가칭)처럼 수강생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적 소통과 공통성 창출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⁴⁷⁾

넷째, 현재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 관련 견학현장은 파주, 연천 등 DMZ 일

47) 이러한 주제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통일인문학연구단과 협업해 신규 과목 개설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 백령도, 북·중 접경지역 등으로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견학현장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인문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좀 더 다양한 견학현장을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파주, 연천의 DMZ 일원 대신 몇 차례 강화도를 견학하며 평화전망대에서 북녘도 바라보고, 실향민의 아픔도 이해하고, 19세기 후반 외세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도 떠올리도록 했다. 「근현대사의 교훈과 통일」과 연관된 견학현장이 지금은 통일교육원 인근 순국선열 묘역, 근현대사기념관 등이지만, 앞으로 강화도 광성보,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대한제국 광무황제의 마지막 처소이자 해방 직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덕수궁, 일제 강점기의 비애와 남북 철도연결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손기정기념관 등으로 얼마든지 확대해갈 수 있다. 해외 견학현장도 북·중 접경지역에 더해 일제 강점 초기 해외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신한촌’이 있고,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될 경우 대륙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고려인의 중심지 우스리스크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V. 맺음말

화가 이중섭이 생의 마지막 해에 그린 ‘돌아오지 않는 강’(1956년)을 평화·통일 강의를 시작하며 보여주곤 한다. 이중섭은 한국전쟁 와중에 고향의 어머니, 아내, 두 아들과 이별해야 했고, 전후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채 40세에 생을 마친 ‘이산의 화가’다. 그림 속 아이는 창틀에 턱을 괴고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아이에게 기다리는 누군가가 곧 집에 올 것이라 알려주지 못한다([그림 5]). 그래서 이 그림은 볼수록 마음이 애잔해지고, 무력감도 든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필자와 듣는 청중 사이에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함께 자리 잡는 것을 느낀다.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1시간 넘게 강의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중섭의 그림들을 보여주거나,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함께 가서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직접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걸 자주 경험했다. 필자가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II장에서 말한 두 가지 객관적 이유들 뿐 아니라 이러한 주관적 경험도 함께 놓여 있다.

[그림 5] 이중섭 ‘돌아오지 않는 강’



1956, 종이에 유채, 18.8 x 14.6, 임옥미술관 소장.

애초부터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던고 갔던 자리가 길이 되었듯이, 통일교육에도 주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 평화·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논리나 근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만,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현재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요구에 부응하려면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이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통일인문교육이 통일경제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판단이 바로 이 글의 출발점이었다.

다행히 국내 학계에서 몇 년 전부터 통일인문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성장하면서 통일의 이유, 방법, 주체 등과 관련된 인식 전환을 제안하고, 통일인문학 연구 성과를 적용한 통일교육도 이루어지면서 통일인문교육 발전의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갖춰지고 있다. 지난 3년 여 동안 통일교육원에서 다양한 통일인문 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토대 덕분이다.

통일교육원의 통일인문교육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교육형식도 다양화해야 하고,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의 요소들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문화의 소통과 공통성 창출 같은 주제를 통일교육의 변두리에서 중심지로 이끌어 와야 한다. 교육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견학현장도 통일인문교육 내용에 맞게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거둔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牛步千里) 꾸준히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자.

※ 참고문헌

- 강만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서울: 당대, 2003.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 서울: 알렙, 2015.
-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김선·김희정·임수진. “통일당위성 담론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교육문화연구』, 제23-6호 (2017).
- 김정수. “문화예술을 통한 북한이해.” 『제3차 중견실무공무원반 교육안내 및 교재(2018. 11. 7.~11. 9.)』.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호 (2015).
- 김진환·김종균. “코리언 생활문화 : 개념, 의의, 연구방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코리언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도정일.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서울: 문학동네, 2014.
- 문화체육관광부 엮음.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 2017. 5. 1~2017. 10. 31』.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 박영균. “통일의 인문적 비전 : 소통으로서 통일론.” 『시대와 철학』, 제24권 3호 (2013).
-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서울: 창비, 2009.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2018.
- 송두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
- 안성교. 『경계를 여행하다』. 서울: 라이프맵, 2017.
-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요한 갈통 지음, 이재봉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이기식. 『독일 통일 20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사상이념팀 엮음.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페러다임』. 서울: 선인, 2011.
- 이병수.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 제28권 1호 (2017).
- 정근식 외.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병호·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공간』. 서울: 현암사, 2011.
-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주승현.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서울: 생각의힘, 2018.
-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 66 (2009).
- 통일부.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8.